

해양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아일랜드 사례연구

(해양금융팀, 임호철)

1 아일랜드 개황

구분	현황	
일반	국명	아일랜드(Republic of Ireland)
	위치	영국 서부
	면적	702만 8천 ha(한반도의 1/3)
	수도	더블린(Dublin)
	민족	아일랜드인(85%) [켈트족] ※ 참조: 영국[게르만계 혼합]
	언어	영어(공용어), 게일어
	종교	가톨릭(85%), 개신교(3%) ※ 참조: 영국[성공회]
	인구	502만명
정치	독립일	1921.12.06.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마이클 D. 하긴수(Michael D.Higgins)
	의회	양원제 (상원 60석, 하원 158석)
	외교관계	1983.10.04. 대한민국과 수교
경제	1인당 GDP	10만 6,059달러(세계2위) ※ 참조: 한국[3만 4,165달러]
	화폐단위	유로 [EURO]
	산업구조	서비스업 60%, 제조업 39%, 농업 1%
	주요산업	금융, 정보통신, 제약, 농축산, 수산업
	주요수출품	기계 및 장비, 컴퓨터, 화학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주요수입품	자료처리장비, 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석유제품, 섬유
	국제신인도	A+ (S&P기준)
지도	<p>The map shows the geographical context of Ireland. Ireland is highlighted in grey and labeled '아일랜드 IRELAND'. It is located to the west of the United Kingdom, which is shown in green and blue. The Atlantic Ocean is to the west, and the North Sea is to the east. Key locations like Dublin (더블린), London (런던), and the English Channel (English Ch.) are marked. The map also shows the Scottish Highlands (스코틀랜드) and the English Channel (English Ch.).</p>	

2 경제정책 변천사 (서유럽의 병자에서 켈트 호랑이로 성장)

□ 영국의 식민지 (12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 약 800년간)

- 토지소유 불평등, 종교적 갈등, 경제적 제한 등을 통한 핍박 및 착취의 시대

토지 소유의 불평등: 토지 대부분을 영국인이 소유, 아일랜드인은 농노로 이용
종교적 갈등: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 종교적 갈등으로 분쟁, 폭력이 발생
경제적 제한: 아일랜드를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경제적 발전을 제한함

- 아일랜드의 척박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작물이 영국으로 유출
- 1984년 발생한 감자잎 마름병으로 아일랜드인의 주식인 감자 생산량이 급감하여 아일랜드 전체 인구의 1/4이상이 굶어죽는 대 기근이 발생함에도 영국은 도움을 요청을 외면하였으며, 오스만제국 등 국제적 비판에 소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함
[영국정부의 총 지원금액: 2,000파운드]

□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1921년)

- 아일랜드 자치법을 통해 독립적인 자치권을 획득
- 1920년 독립시기 초반에 아일랜드는 농업 중심국가로 운영

노동인구의 50%이상이 농업부문에 종사
전체 해외 수출액의 90%을 농산물에 의존
농산물의 90%이상을 영국으로 수출 (독립 후에도 영국시장의 의존성이 강했음)

□ 보호주의 경제정책 운영 (1922년 ~ 1955년)

- 민족주의 및 보호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가정책 운영
- 높은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으로 내수중심의 자국산업 육성 전략채택

아일랜드 보호주의 조치
* 높은 관세율 적용 (수입품목별 15~75%)
* 외국인의 기업 운영 시 지분 51%이상 & 의결권의 2/3이상 아일랜드 소유조건 필요

○ 정책운영 결과

- 자유무역 및 외국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표방한 인근 유럽 국가와 반대되는 경제정책은 결국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실패함
* 약 40만명의 아일랜드 국민이 본국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됨

□ 대외 개방형 경제정책으로 전환 (1955년 ~ 1973년)

- 보호주의 및 내수위주 정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수출창조 및 대외 개방형 정책으로 방향전환

*경제 다각화: 농업 중심에서 다양한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 산업지원 정책 시행
*외국투자유치: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혜택 제공 및 투자유도
*국제무역확대: 다양한 국제무역 협정에 가입, 수출확대 정책시행
*국내시장개발: 외국기업의 아일랜드 시장진입 접근성 향상 및 경쟁촉진 정책 마련
*교육/기술향상: 교육제도 강화 및 기술개발 촉진하여 노동 생산성 향상

- 수출촉진 및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정책기관 설립

*산업개발청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IDA)
·설립(1949년): 관세 및 쿼터업무 목적
·업무확대(1950년): 해외직접투자(FDI) 및 내국인 기업 창업 촉진 목적
*수출촉진원 (Export Promotion Board, EPB)
·설립(1951년) : 수출촉진 목적
*직업훈련국(Foras Tionscal, FT)
·설립(1952년) : 자본투자, 직업훈련 및 관광촉진 등 각종 보조금 지급 목적

- EU회원국에 가입 및 수입 관세/쿼터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

- 정책운영 결과

- 1955~197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4.5%달성, 매년 고용률 1%씩 증가 및 인구성장률 15%증가(약 20만명 인구유입)등 아일랜드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달성

□ 국내외 경제위기 직면 (1973년 ~ 1983년)

- [국내시장] 불안정한 노사관계 지속

- 1970년대 아일랜드는 한마디로 '노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파업으로 공장이 가동되는 날보다 멈춰서는 날이 많은 시장환경이 조성됨

* 노사분규 발생건수: 1974년(250건), 1984년(200건)

○ [국외시장] 1,2차 오일쇼크 발생

- 아일랜드는 일차 에너지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1973년부터 시작된 오일쇼크 발생에 따라 에너지 수입 비중이 상승(GDP의 2.6% → 9%), 국가부채 비중 증가(GNP의 64% → 105%) 및 물가 상승률 20% 이상 폭등

○ 공공부문 지출확대 정책운영

- 아일랜드 정부는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문 지출확대 정책을 펼침

○ 정책운영 결과

- 정책운영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GDP의 15%까지 증가하였고, 국민들의 세금부담 가중으로 (소득의 60%수준까지 세금부과) 20만명 이상 해외이민 순유출 현상이 발생되며 아일랜드는 국가부도의 위기로 내몰림
- 노사불화, 오일쇼크 및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아일랜드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역설적이게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며 향후 약 20년간 아일랜드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디딤돌이 되어줌

□ 노사정 사회협약을 통한 고성장 경제시기 (1981년 ~ 2007년)

○ 사회협약 프로그램 운영

- 심각한 수준의 실업률 및 기업부도 발생 등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아일랜드 노사정 협상을 통하여 1987년 제1차 사회협약 프로그램으로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 (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PNR)」 체결 및 운영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금융중심지(IFSC) 개발

- 1987년 국제금융센터(IFSC)가 세제지원지역(Tax Incentive Zone)으로 EU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아일랜드 금융시장발전의 기폭제 역할 수행

Tax Incentive Zone의 주요내용

- * 법인세율 인하: 기업들이 아일랜드 내 사업 확장에 유리한 조건제공
- * 세제혜택: 특별한 세제혜택 제공을 통한 투자유치 및 현지 기업의 경쟁력 향상
- * 규제완화 조치: 유연한 규제 환경 제공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 및 성장 지원
- * 인프라 지원: 기업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환경구축 및 서비스 지원

○ 정책운영 결과

- 제1차 사회협약 프로그램 체결을 통하여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감소되었으며, 외국기업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기반이 마련 되면서 미국의 거대기업 인텔 등의 본격적인 투자 활동이 시작됨
- 이러한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외국 기업의 적극적 투자 활동은 아일랜드 산업 구조를 농업중심에서 지식기반산업(서비스/하이테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0년 이후 약 10년간 7% ~ 11%이상의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유럽의 “켈트 호랑이(Celtic Tiger)”라고 불리게 됨

□ 금융위기에 따른 구제금융 신청 및 재도약 시기 (2008년 ~ 현재)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 및 IMF구제금융 신청

- 2007년 기준으로 아일랜드는 4.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은행 대출의 50% 이상이 모기지 및 주택건설 대출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일랜드 산업 포트폴리오가 외국자본에 의존한 금융업 및 일부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 -7.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0년 11월 IMF에 구조금융을 신청함

아일랜드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 * 지나친 외국(투자)자본 및 외국기업 의존성
- * 높은 금융업(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의존성
- * 국내 제조산업 경쟁 기반 취약

☞ 제조업의 비중이 GDP의 36% 수준이나, 이는 아일랜드 자국 산업기업이 아닌 글로벌 IT 및 제약회사의 하청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강력한 재정 긴축 프로그램 및 노동개혁 시행

- 글로벌 금융위기 따른 IMF구조금융 신청을 통해 85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공공부문 10%인력감축, 공무원 임금 14%삭각, 사회보장지출 8%삭감 등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 축소를 통한 강도 높은 재정긴축(안)을 수행함
- 아일랜드의 경제성 촉의 하나였던 사회연대협약 개정(안) 철회 및 기업 차원의 자율 협약에 따라 임금결정을 합의하는 노동개혁을 시행하는 조치 등을 통해 2013년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2022년 기준 12%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재성장 하고 있음

3 아일랜드 금융시장 발전요인

□ 노·사·정 사회협약체결을 통한 경제발전 (1987년~2007년)

○ 사회협약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제공

- 사회협약을 통해 사회경제적 목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집단의 대 합의를 이끌어냄으로, 노사관계 및 경영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

사회협약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 *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3년간 2.5% 이내로 임금인상률 제한 (20%→ 2.5%)
- * 소득세율 인하(개인 세금감축)을 통한 근로자의 소득보상 지원
- * 공무원 신규채용 동결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축소,연기
- * 조기퇴직제도를 통한 긴축재정 운영 및 재정건정성 강화
-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확대
- *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부분적으로 수용 및 노동자보호를 위한 노동법 개정

- 사회협약 체결은 노사협약, 재정조정, 투자유치, 산업다각화, 국제무역강화 등을 목적으로 2006년까지 7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며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한축을 담당함

〈시기별 사회협약체결의 주요내용 요약표〉

기간	사회협약	주요내용
1987 ~ 1990	국가재건 프로그램[PNR] (Program for National Recovery)	·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통합 전략 · 임금상승 완화 및 재정보상(소득제 인하) · 저임금 노동자 보호/특별상여금 제공 · 사회복지 이전지출 유지/공공지출 통제
1991 ~ 1994	경제·사회진보 프로그램[PESP] (Program for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 PNR정책 기조 유지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용증대 · 임금상승 완화 및 재정보상 지속 · 정부부채/GNP비율 감축
1994 ~ 1996	경쟁력·직업 프로그램[PCW] (Program for Competitiveness and Work)	· 임금상승 완화 및 재정보상 지속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고용창출
1997 ~ 2000	통합·고용·경쟁력을 위한 연대[P2000] (Partnership 2000 for Inclusion, Employment and Competitiveness)	· 임금상승 완화 및 재정보상 지속 · 사회연대의 참여 폭 확장 (사회적 배제척결) · 사용자 수준의 사회적 동반자 관계 확대 · 소득세 감면 및 사회통합 예산확보

기간	사회협약	주요내용
2000 ~ 2003	번영·공정 프로그램[PEE] (Program for Prosperity and Fairness)	· 임금인상 완화 및 재정보상 (세금감면확대) ·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사회불평등 해소 · 공공 부문의 임금 형평성 제고 · 각종 연금 및 수당 인상
2003 ~ 2005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SP] (Sustainable Progress)	· 임금 상승 자제/퇴직수당 인상 · 물가 상승 억제 및 주택공급 확대 · 공공부문 규제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2006 ~ 2015	2016년을 향하여[T2016] ※ 글로벌 금융위기 및 IMF 긴축재정 정책 실행 등으로 사회협약체제 붕괴	· 임금 상승억제 및 최저 임금인상 · 노사 간 협력, 불법분규 자제 ·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의 유연성 제고 · 수명주기 맞춤형 지원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등

□ 아일랜드 EU가입 및 유럽시장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1973년 ~ 현재)

- 1973년 아일랜드가 EU전신인 경제공동체(ECC)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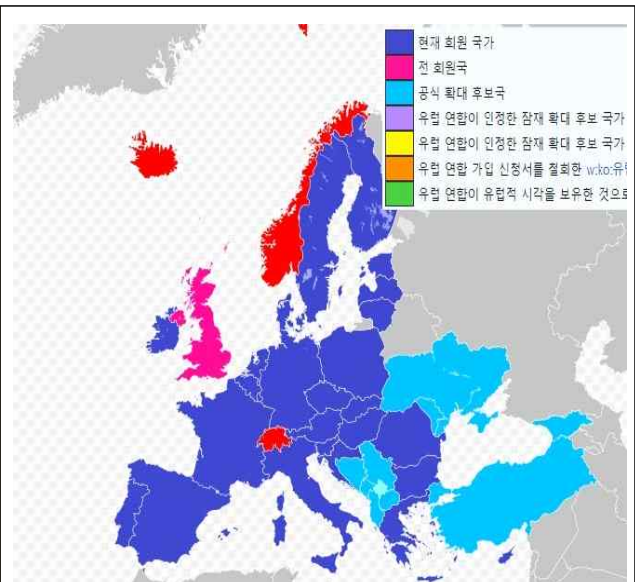
기간별 EU회원국 가입현황

- * 1957년 ECSC창설국(6개국) -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델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 * 1973년 (3개국) 추가가입 -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2020년 EU탈퇴)
- * 1981년 (1개국) 추가가입 - 그리스
- * 1986년 이후 (18개국) 추가가입 - 스페인, 포르투갈 등

- 아일랜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 및 판매를 위한 전략적 전진기지로 활용됨

세제혜택, 노동력, 접근성 등 유리한 투자환경

- * 낮은 법인세 및 다양한 투자혜택 제공
- * 주변 유럽국가 대비 저임금의 풍부한 양질의 젊은 노동력 제공
- * 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문화적 공통성 높음
 - ☞ 공용어를 영어로 사용하며,
 - ☞ 영미법을 적용하는 유럽 국가임



□ 과감한 대외개방정책(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운영 (1955년 ~ 현재)

○ 산업개발청(Industrial and Development Agency, IDA)기능 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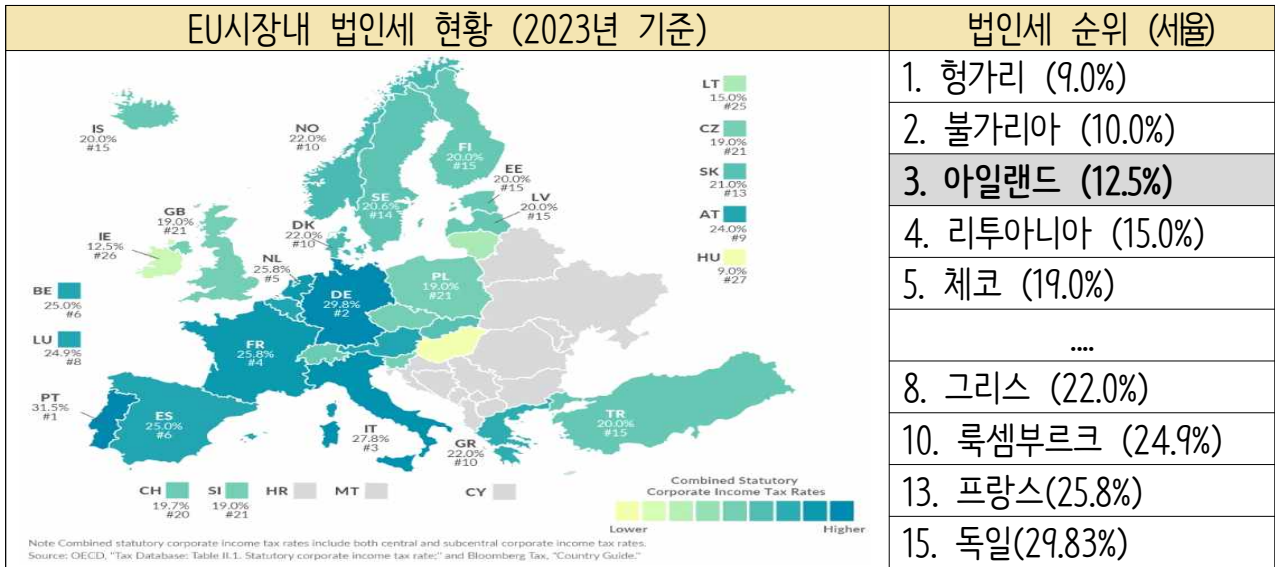
- 1950년대 시행한 자국산업보호 및 정책을 포기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산업개발청(IDA)의 기능을 외국인 투자유치로 확대하고, 강력한 권한 및 고도의 운영 자율성 부여

IDA의 주요업무

- *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업정책 입안 등 책임부여
- * 산업공단 개발/운영 및 투자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인프라 제도 마련
- * 투자조건협상 유인책 마련 및 투자업체의 사후관리 수행
- * 전략적인 유치가 필요한 기업의 경영총과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지원

○ 낮은 법인세율 및 각종 조세지원정책 운용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통적으로 매우 낮은 법인세율(12.5%)를 부과하고 아일랜드 소재 법인의 해외수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유럽내 가장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IP)제도를 운영하는 등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함



※ (참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인상 압력 및 최종 합의(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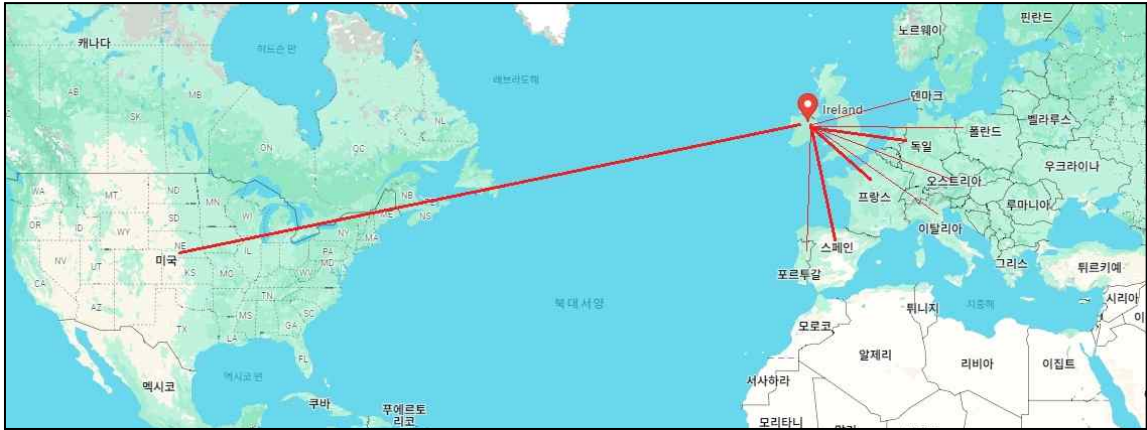
2021년 미국 등 131개국 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안에 대하여 아일랜드는 소국(小國)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안하였으나, “국제적 소외국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우려” 별도의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합의(안)에 근거하여 24년부터 법인세율 15%로 인상조치함

- ☞ 연매출 7억5천만 유로미만의 수익을 얻는 기업에 한정하여 12.5%세율 유지
- ☞ 첨단 기술기업의 경우 법인세 6.25% 추가 인하

□ **親기업적 투자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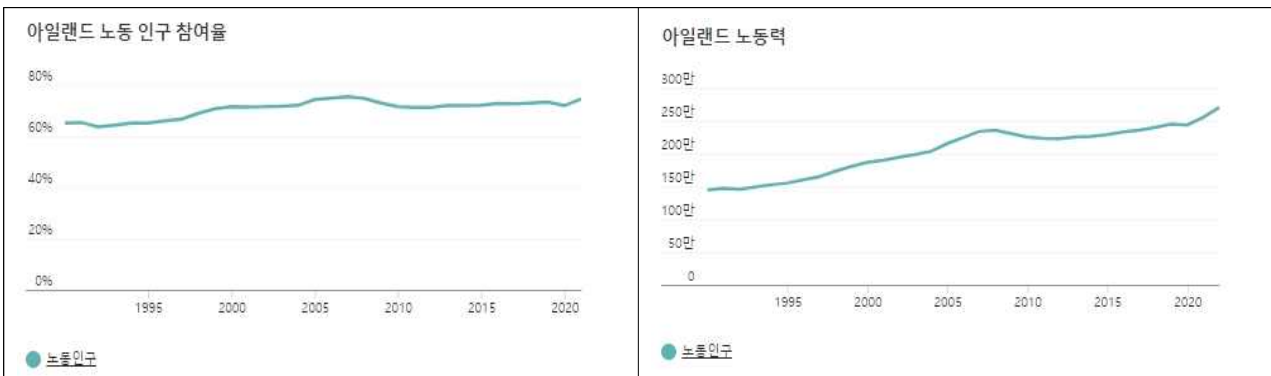
○ **지리적 접근성 및 공통문화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투자 네트워크 환경조성**

- 아일랜드는 지리적으로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유럽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며, 문화적으로 유럽연합에서 거의 유일한 영미법을 운영하는 영어권 국가임
- 아일랜드계 미국인¹⁾들과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투자를 받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



○ **높은 교육수준 및 기술적 숙련도를 가진 양질의 노동력 제공**

- 노동인구의 가용성 측면에서 25세 이하 인구비중이 약 34%로 유럽에서 가장 젊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약 55.4%로 유럽 국가평균(39.4%)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함
- 기술적 측면에서도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STEM²⁾분야 졸업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주변 유럽국가들과 비교하여 양질의 젊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



* 데이터 출처: datacatalog.worldbank.org

1) 2017년 미 통계청에 따르면 아일랜드계 미국인은 미국 백인 중 독일계 미국인 다음으로 많은 인구 구성비를 차지함
 2)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약자

4 親기업 정책을 통한 국제금융센터 운영 및 배후산업 육성

□ 더블린 국제금융센터(IFSC)육성 정책운영

- (물리적 측면)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을 통한 인프라 환경구축
 - 1987년 아일랜드 정부의 조세유인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IFSC설치를 발표하였으며,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15.8ha면적 내 사무공간, 호텔, 음식점, 주거공간, 소매점 및 아일랜드 국립대학 캠퍼스를 소재시킴
- (기능적 측면) 금융기관 등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IFSC 내 은행업, 보험, 증권발행, 뮤추얼 펀드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자격요건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IFSC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건물구입(임대) 및 장비구입에 대한 감가상각 인센티브 제공

- ☞ 건물비용 관련: (건물 소유자의 경우) 첫 해 100% 감가상각 인정하며, (건물 임대인의 경우) 첫 해 54% 감가상각 인정 및 익년부터 매년 4% 고정율로 감가상각 인정
- ☞ 장비구입 관련: 신규장비 구입 시 첫해 100% 감가상각 인정

*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세금 면제

- ☞ IFSC입주 한 생명보험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 UCITS 등 일부 투자펀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헤지펀드에 대한 자본이득세 및 증권거래세 면제
- ☞ IFSC입주기업 및 직원, 자선사업 또는 연금기금, 공동투자기금, 종업원주주신탁, EU회원국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 기업 등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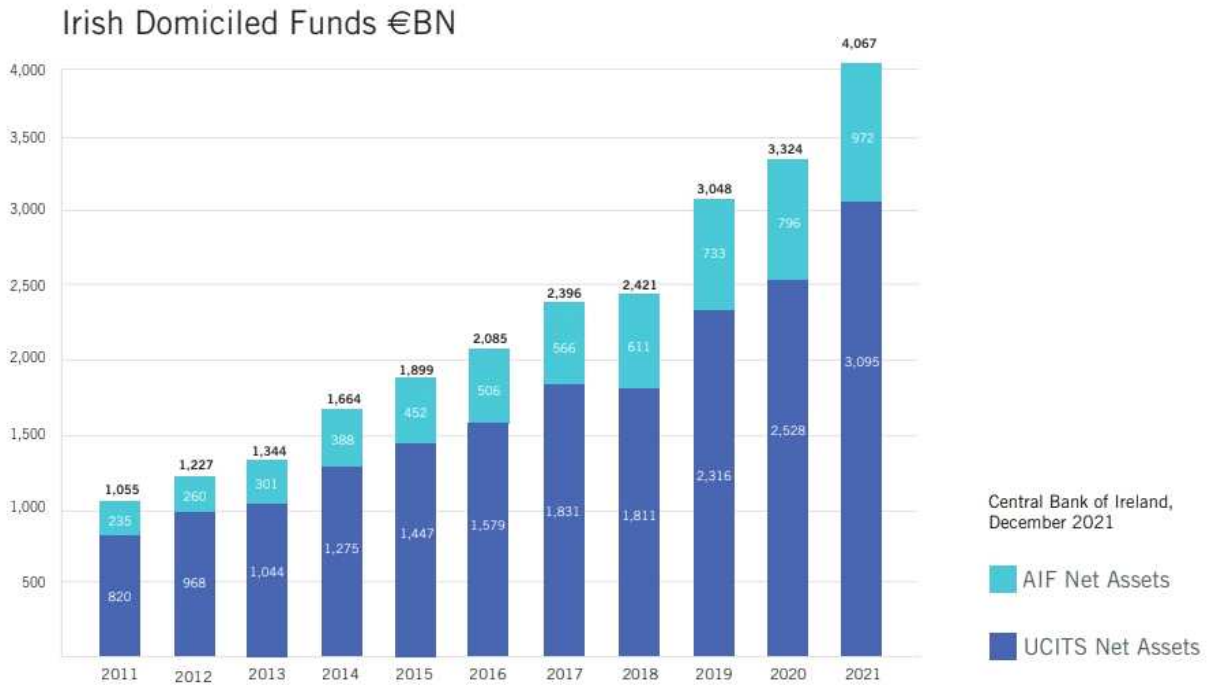
- (그외정책) 아일랜드 재정법(Finance Act 1995)를 통한 조세 인센티브 제공
 - 아일랜드에 소재하며 신규고용 창출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 유입을 가져오는 금융기관 및 해외지사 활동을 통해 수익이 벌어들이는 기업에 대하여 발생 수입분에 대하여 미과세함
 - ☞ EU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하여 운영됨

□ 펀드산업(백오피스) 특화금융 정책운영

○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백오피스 사업선정

- 아일랜드는 펀드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전인 1980년대 펀드 시장의 성장성을 예상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실행함
- 아일랜드의 중심 전략인 FDI의 목적 중 하나는 자국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따라 고학력 인력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인 금융업에 집중하였으며, 국제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영국의 프런트 업무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력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백오피스 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선정하여 운영

아일랜드 소재 순자산 및 운영 펀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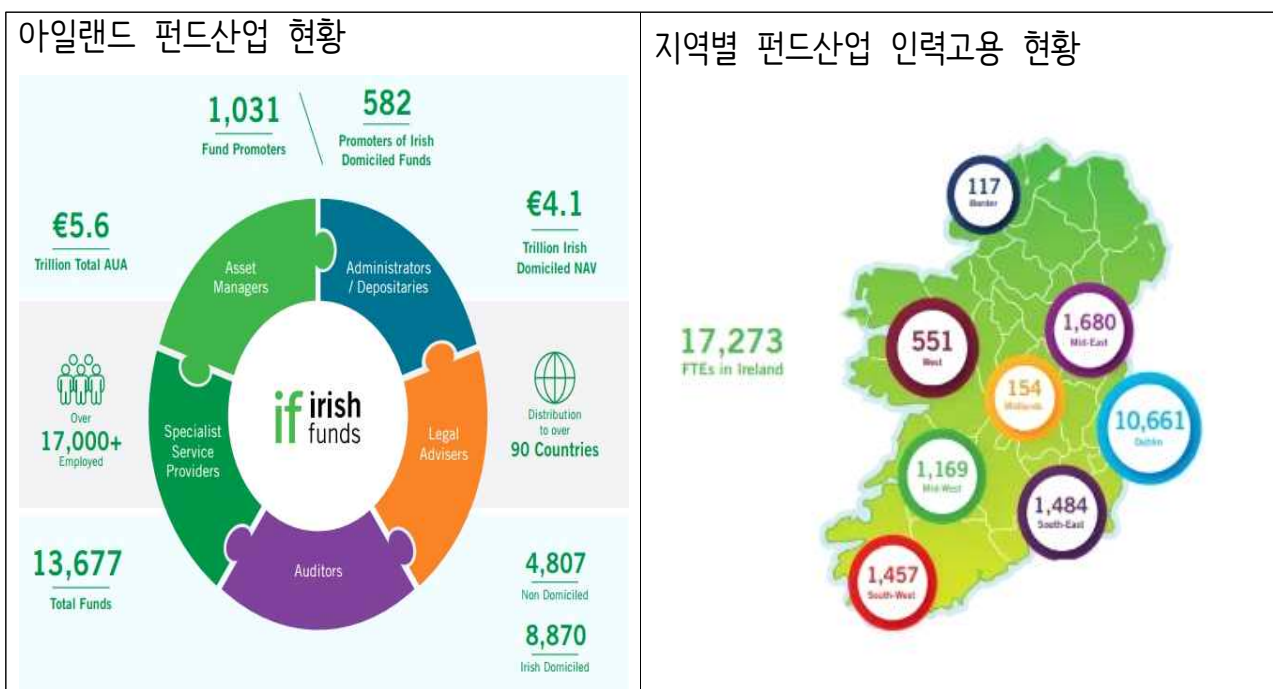


연도	순자산(백만유로)	운영 펀드수(개)
2005	584,000	3,798
2010	964,000	4,743
2015	1,898,823	6,201
2020	3,324,194	7,962
2023	4,082,727	8,870

* 자료출처: irishfunds.ie

○ 백오피스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지원 정책운영

- 아일랜드는 IFSC개발과 함께 백오피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장외파생 상품 가치평가/법적구조를 다룰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³⁾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펀드설정을 위한 유연한 법구조 지원⁴⁾ 및 백오피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조세혜택⁵⁾을 지원함으로써 유럽 내 펀드서비스 업무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구축함
- 백오피스 산업육성에 따라 사무수탁회사, 보관회사, 판매사, 회계법인, 법률회사 등 550개 이상의 기업이 아일랜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더블린을 포함한 주요지역에 3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1만7천명 이상의 전문가가 종사함



* 자료출처: irish funds annual review 2023

* (참조) 아일랜드는 외국 기업이 수도권(더블린)등 특정 지역으로 몰리지 않도록 FDI운영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함

○ 헤지펀드 특화 서비스 센터운영 (No1 for hedge fund servicing)

- 펀드산업 및 백오피스 산업의 성장요인을 반영하여 아일랜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헤지펀드 수탁업무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특화된 센터로 평가됨

3) IFSC개발과 더불어 금융기관, 컨설팅사 및 회계법인 등을 금융중심지(더블린)에 집중시켰으며, 금융IT전문가, 금융서비스 전문가, 변호사 등 우수한 인력풀이 확보
 4) 유연한 법구조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펀드 설정이 가능해짐 유럽의 대표적인 공모펀드인 UCITS에 가입함으로써 룩셈부르크에 이어 유럽의 펀드/사무수탁 중심지로 급성장함
 5) 펀드 관련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공제혜택 제공

□ 항공기 리스사업 지원정책 마련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 항공기 리스 사업의 발상지

- 1975년에 아일랜드에 설립된 기네스 피트 항공(GPA)은 항공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항공사에 자산을 임대/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여 항공기 임대 금융사업 분야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항공기 리스와 관련 복잡한 금융거래와 법률구조를 개선하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며 아일랜드가 세계 항공기리스 분야의 발상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

○ 항공기 리스 지원정책 운영

- 항공기 금융 운영에 따른 전문지식 획득(구매,리스,유지보수 및 운영, 금융거래전략)과 더불어 아일랜드 정부가 제공하는 유리한 법인세구조, 74개국과 광범위한 이중과세 조약 체결 및 항공기 금융 지원을 위한 견고한 법률/프레임 등 각종 지원정책을 통하여 전세계 상업용 항공기 리스의 60%이상을 관리하고, 현재도 전세계적으로 증가되는 항공기 수요에 대응하여 발전을 지속하고 있음

항공기 금융관련 주요정책

* 항공기 등록 및 소유권 이전의 간소화

- ☞ 등록/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절차마련 및 국제항공기 등록 증명서 (Certificate of Airworthiness)발급절차 간소화

*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 제공

- ☞ 낮은 법인세율 제공(12.5%), 항공기 리스와 관련된 수익금에 대한 세금면제 및 감소 혜택제공을 통한 금융비용 부담축소

* 74여 개국과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체결

- ☞ 항공기 리스 및 금융회사들이 다른 국가와 거래에 대한 세금부담을 축소시킴으로 거래의 투명성 및 편의성 제공

* 파산 및 채권자 권리 보호

- ☞ 국제항공기 장비 등록 협약(Cape Town Convention)을 채택하고, 해당 권리를 표준화 함으로 금융기관 및 리스회사 파산시 항공기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보호 장치 마련

* 규제 적합성 모니터링 실시

- ☞ 국제 항공기 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와 같은 기관을 통해 항공기 리스 및 금융회사가 항공안전, 환경규제 및 기타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모니터링 및 감독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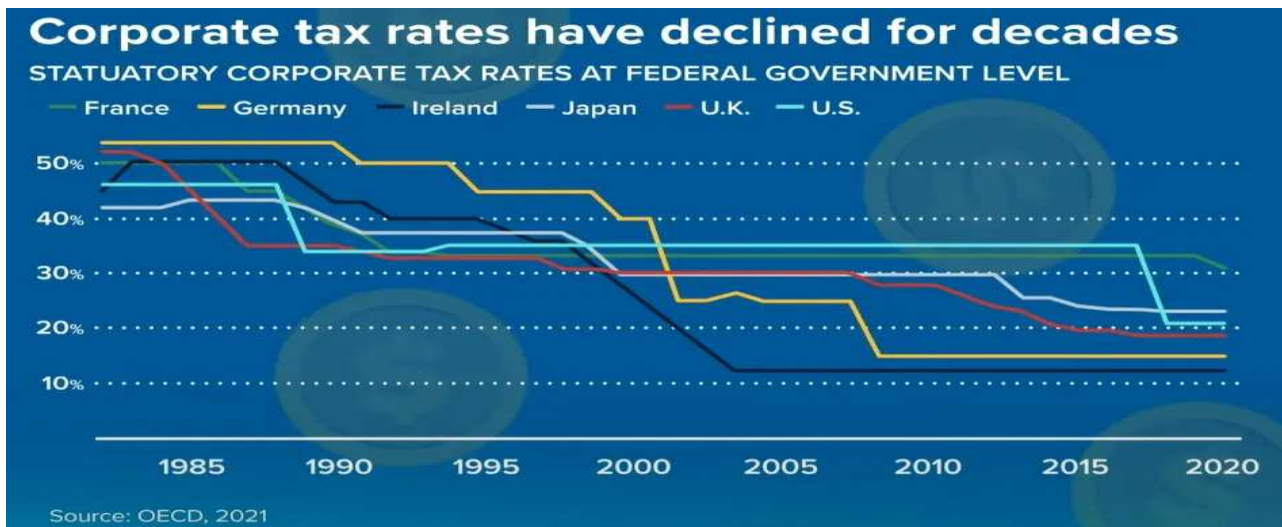
5 아일랜드 금융중심지 운영정책의 시사점

□ 법인세 경쟁력 확보 및 일관성 있는 정책운영

○ 20년간 법인세율 12.5% 유지하는 조세 정책

- 조세정책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통해 아일랜드는 유럽 국가 중 매력적인 투자처로 발전함
- 2022년 기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 및 화이자 등 세계 10권의 제약회사 중 9곳이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약 1,800개의 글로벌 기업체 유치에 성공함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260만명)의 11%인 30만명 이상 직접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킴

1. 주요 국가의 연도별 법인세 인하조치 현황



2. 아일랜드의 글로벌 기업 유치현황

주요 투자국	기업체수	고용인원
1. 미국	947개	208,958명
2. 독일	103개	14,744명
3. 영국	179개	11,819명
4. 프랑스	80개	9,049명
5. 그 외 EU국가	193개	22,679명
6. 기타	294개	34,226명
합계	1,796개	301,475명

* 자료출처: DETE Annual Employment Survey 2022

□ 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FDI정책운영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편의서비스 및 세제지원 혜택 제공

- 아일랜드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유치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첨단 기술기업의 경우 법인세 6.25%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세계적인 연구 및 기술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업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R&D연구개발 부문에 집중함

R&D관련 세제지원 혜택

- * 시장 타당성 분석 및 R&D연구개발 등 활동 시 최대 25.0%의 세금공제 혜택 제공
- * 미디어 관련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대 32%의 세금감면 혜택 제공

* (참조)R&D관련 세제지원을 통하여 Master Card의 European Technology Hub구축, City Bank의 Global innovation labs 및 Fidelity Investment의 FCAT 연구소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기관 운영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아일랜드 산업청(IDA)은 전세계 22곳에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기업의 의사결정권자 및 해외기업의 아일랜드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혜택 및 편의 서비스 제공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등

- * 세금, 비자, 생활비 등 아일랜드 방문과 관련된 종합 솔루션 제공
- * 해외 기업세무 컨설팅 및 해외 기업 주재원 등 자녀 교육 컨설팅 지원
- * 해외기업 아일랜드 주재원에 한하여 발생소득의 3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별 지정인 인센티브 프로그램(SARP)」를 운영함

* (참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등을 통해 2023년 일본 아스텔라스 제약회사의 투자결정 및 생산기지 구축, 중국 최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생산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개 생산기지 구축 등의 성과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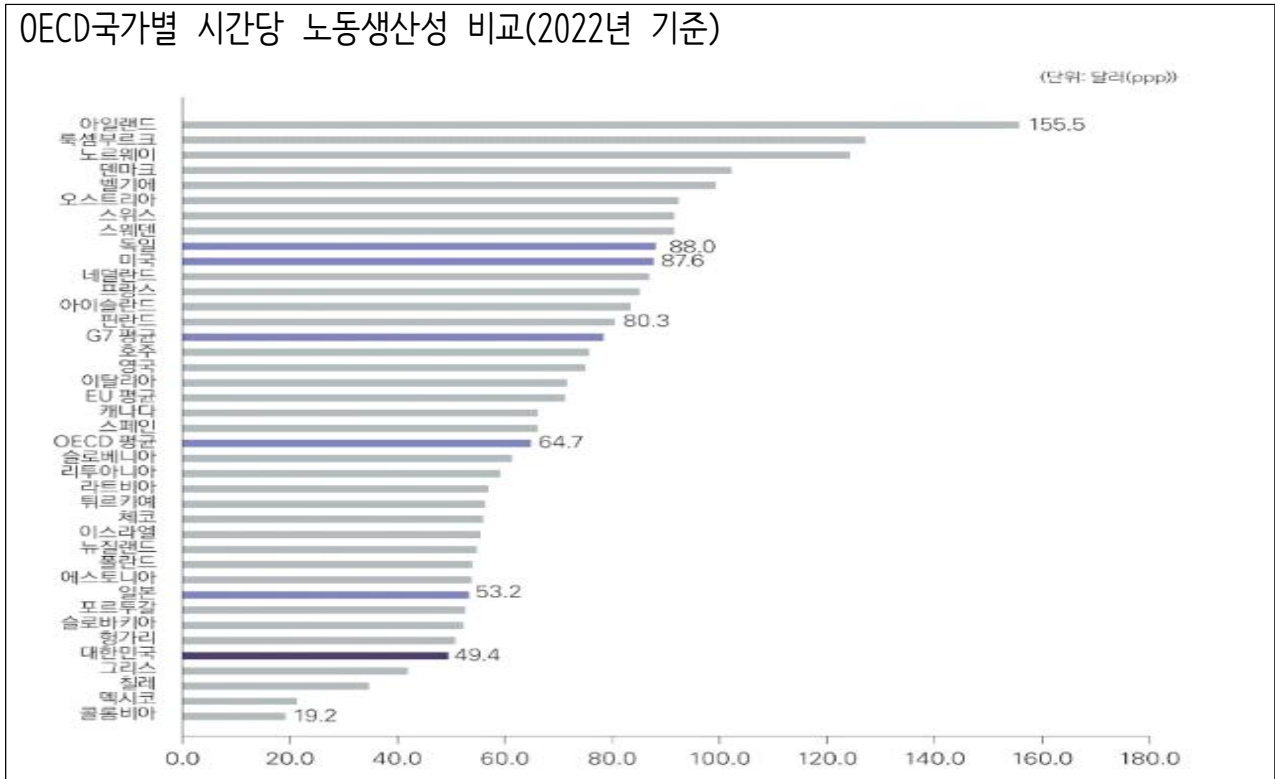
□ 출산 및 교육정책을 통한 양질의 노동력 제공

○ 유럽 시장 내 가장 젊고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 확보

- 아일랜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11.5%의 인구증가율을 보였으며 25세 이하 인구비중이 전체인구의 약 34%로 유럽 내 가장 젊은 노동력을 보유함
- 또한, 1960년부터 시행한 대학 무상교육 정책 등을 통하여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유럽의 평균인 39.4%로 보다 높은 55.4%를 유지함

○ OECD국가 중 최고의 노동 생산성 확보

- 출산 및 교육정책을 통하여 공급되는 양질의 노동력은 시간당 155.5달러의 노동 생산성을 이끌어내며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준 달성함



* 자료출처: 한국생산성본부(2022년)

□ 지리적/문화적 이점을 활용한 정책운영

○ 유럽 및 북미대륙의 문화적 유사성

- 아일랜드는 EU시장 내 유일한 영어권 국가이며, 거의 유일한 영미법을 운영하는 국가임. 또한, 19세기 중반 대기근 등으로 수백만명의 아일랜드인이 미국으로 이주함에 따라 현재 아일랜드계 미국인이 미국 전체 인구구성비의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지리적으로는 유럽 시장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 배경에 따라 북미대륙과 민족적, 문화적, 법률적 유사성을 가짐으로 유럽 내 매력적인 투자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 브렉시트(Brexit)를 통한 반사이익 공유

- 2016년 영국의 EU연합 탈퇴에 따라 메릴린치 및 바클리즈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유럽시장 대체 전략기지로 더블린을 선택하여 이동함. 이는, 아일랜드의 親기업 운영 정책 및 지리적/문화적 이점이 반영된 결과로서 브렉시트(Brexit)사건을 통해 아일랜드가 유럽시장 내 반사이익을 향유하는 결과로 나타남

□ 시장 친화적 규제감독을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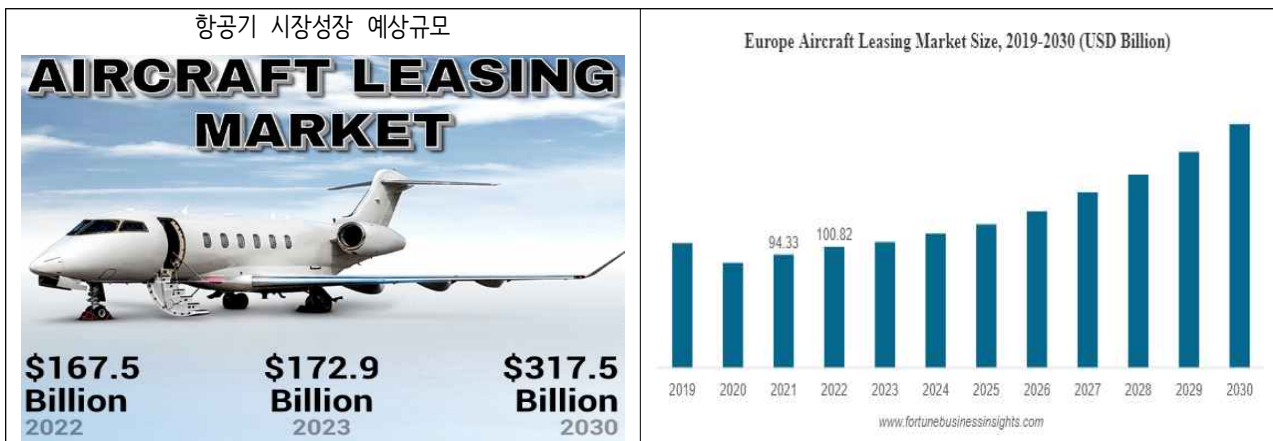
○ 시장 친화적 규제정책 발굴 및 감독실시

- 아일랜드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보다는 산업발전 촉매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 전문 및 적격투자자에 대한 각각 다른 맞춤형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펀드관련 규제 범위 조정을 위해 펀드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시장 친화적 규제감독을 실시함
- 74개 이상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구조화 펀드를 통한 이중조세 조약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전폭적인 제도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에서 아직 초기 단계인 대체투자펀드(Alternative Investment Funds, AIFs)를 위한 규제들을 제공하여 신상품 개발과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항공기 임대시장에 최적화된 인력공급 및 금융지원 정책운영

○ 항공 임대시장의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 운영

-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 2024)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항공기 임대시장의 규모는 1,675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고, 최근 저가 항공사에 대한 수요 및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 항공기에 대한 대체 수요가 증가하여 항공기 임대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는 3,175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속에서 아일랜드는 지난40년간 항공기 임대금융 사업운영을 통하여 축적해온 고도의 전문지식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항공기 금융거래 및 법률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다양한 금융정책(구매절차, 세제혜택, 채권자보호, 모니터링 등)을 쏟아내고 있고, 「20대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정책」과 함께 항공기 임대산업 분야의 선두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발표함

□ 인력 및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투자 정책운영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 우수인력 배출

- 전략적 요소의 하나로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8개 종합대학, 5개 기술대학, 1개의 기술연구소를 통해 EU국가 평균보다 많은 STEM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있음

○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정책

- 아일랜드 대학, 기술연구소 및 기타 공공자금 지원 연구기관 등에서 우수한 전문 인력 활용 및 연구개발비 투입정책을 통해 수십개의 차세대 기술이 개발함
- 이를 통하여 플립디시, 렛츠겟체크, 워크유먼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의 탄생하고, 신기술을 응용하여 140개 이상의 기업들이 분사하면서 약 1,2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차세대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프로젝트로 6억 7,200만 유로 투입” (2022)

* 기술, 생명 과학 및 엔지니어링을 포함 73개의 견습 프로그램 개발

* 2023년 기준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27,000명의 견습생 지원

* 더블린에 소재한 엔지니어의 17%가 신흥분야인 AI경험 등을 보유하는 효과 발생

☞ 주변 EU국가 평균대비 2배 수준

□ 외국자본 의존형 금융산업 체계로 금융위기 약화

○ 높은 외국자본 및 글로벌 기업 의존성

-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아일랜드를 오랜 기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였고, 1인당 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성장 국가로 만들어 주었으나, 과도한 외국기업 의존적 정책은 세계 경제 변화 및 주변국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다국적기업들의 이탈 현상으로 전환 시 아일랜드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⁶⁾

○ 국가 주도산업의 부재에 따른 고용창출능력 한계

- 아일랜드는 글로벌 제약회사 및 의료관련 회사에 의존한 제조분야(의약품 및 의료 기기 제작 등)외 자동차,기계,조선,철강,화학,광물채권 등 기술 및 인력 중심의 대규모 자국인력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산업군이 부재함

아일랜드의 외국기업 의존도 현황 (2022년 기준)

*아일랜드의 주요 재정수입원인 법인세의 86.5%를 외국계 기업이 충당

* 외국계 기업으로 충당하는 법인세의 55% 이상이 매출액 상위 10대 글로벌 기업으로 발생되고 있음

출처 아일랜드 정책자문위원회의 발간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진출한 미국 10대 기업 절반이 철수할 경우 30억 유로(약4조 500억원 규모)의 세수손실이 발생되며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함

○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한 미래기금(Future Fund)조성 계획

- 아일랜드 정부는 특정산업 및 소수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수 의존도 및 향후 경제침체에 따른 ‘경제적 우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1000억 유로(144조원) 규모의 「미래기금(Future Fund)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음

6) 2007년 부동산과 금융산업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전체 GDP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건설업 붐이 발생되었지만, 외국자본, 외국기업이 투자 및 유치로 성장한 아일랜드는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으로 EU국가 중 심각한 경제 직격탄을 맞으며 처음으로 IMF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나라로 전락하였으며, 경제 부국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백오피스 산업에 대한 유럽 내 신흥 경쟁국의 추격 가속화

○ 단편적 업무처리에 따른 전문지식 획득 및 산업확장의 한계점

- 아일랜드는 펀드 운영의 후선 업무인 펀드 백오피스 산업을 지나치게 특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젊은 고학력의 인력이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 진행 역시 단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개발/운영되고 있어, 미래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산업확장에 한계점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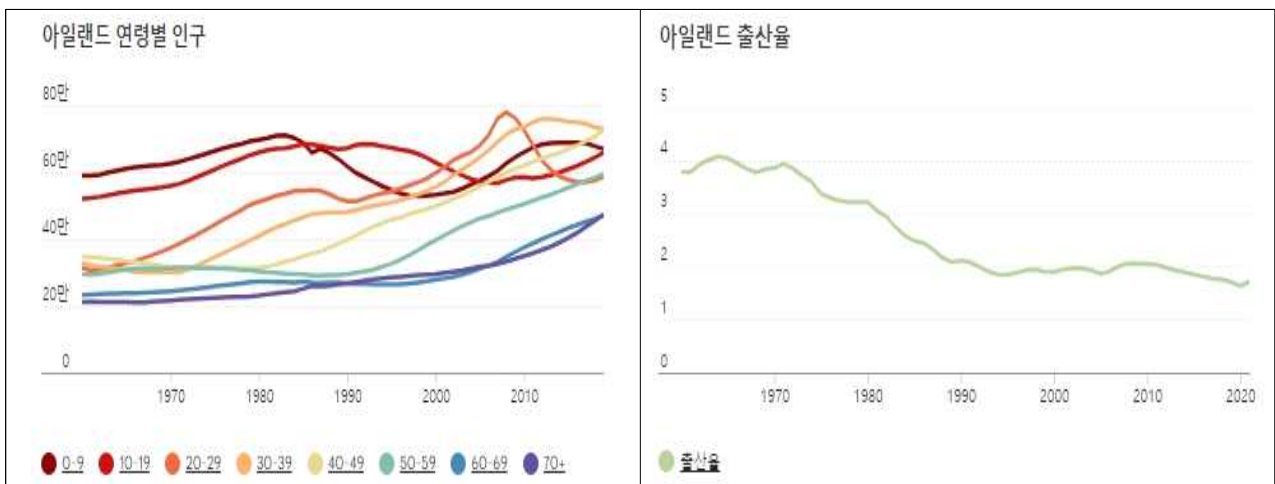
○ 저비용을 무기로 한 신흥 경쟁국의 백오피스 유치전략

- 금융중심지를 추진하고 있는 동유럽 및 아시아 신흥 도시들이 펀드 백오피스 산업 관련 영역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면서, 그 동안 유럽내 저비용 센터로서 이점을 누리던 더블린의 장점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성장잠재력 위축 가능성

○ 출산율 저하 및 65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

- 출산장려 정책을 통하여 2021년 기준 501만명의 인구증가효과가 발생되었으나, 이는 아일랜드 대기근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 후 1841년 수준인 820만명을 넘어서지 못하는 추세임⁷⁾
- 2021년 기준 아일랜드의 출산율 감소(1.63명)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증가(74만명)하며 고령사회로 진입⁸⁾하면서, 주요경제 성장 동력의 한축인 「젊은 노동인력 공급책」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데이터 출처: datacatalog.worldbank.org

7) 아일랜드 인구변화 추세: 1841년(820만명) → 1961년(282만명) → 2021년(501만명)

§ 1981년~ 1961년 기간 아일랜드 대기근 및 보호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대규모 인구유출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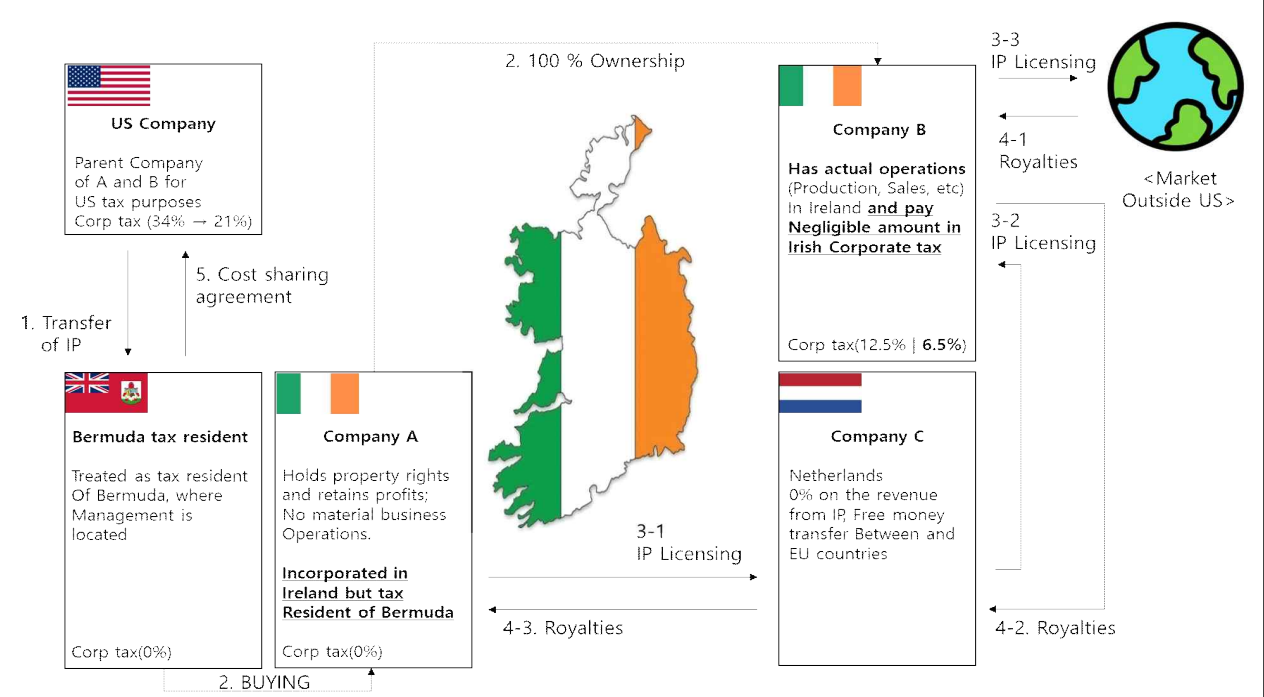
8)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7%이상 차지함

□ 조세 회피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지속적인 정치적 압력

○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조세회피 전략 폐지

- 낮은 법인세율과 더불어 지적재산권(IP)정책⁹⁾을 활용한 절세전략으로 아일랜드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더블 아이리시 워드 어 더치 샌드위치 전략(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¹⁰⁾」을 운영하고 있었음
- 하지만, 각국 규제당국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세회피성격의 전략이 운영되지 않도록 아일랜드 세법 개정 압력을 가했으며, 결국 2014년 기준으로 6년간 유예기간을 준 후 2020년 이후에는 해당 전략을 이용불가능 하도록 조치함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전략 요약정리



- * 미국법인세 21%(한시적) [2025년 이후 기존세율 34% 복원예정]
- * 아일랜드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기업 A (버뮤다 소재)에 대하여 미과세
- * 아일랜드에 소재하지는 법인기업 B에 과세 (첨단 IT기업의 경우 6.5%)

○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 합의 및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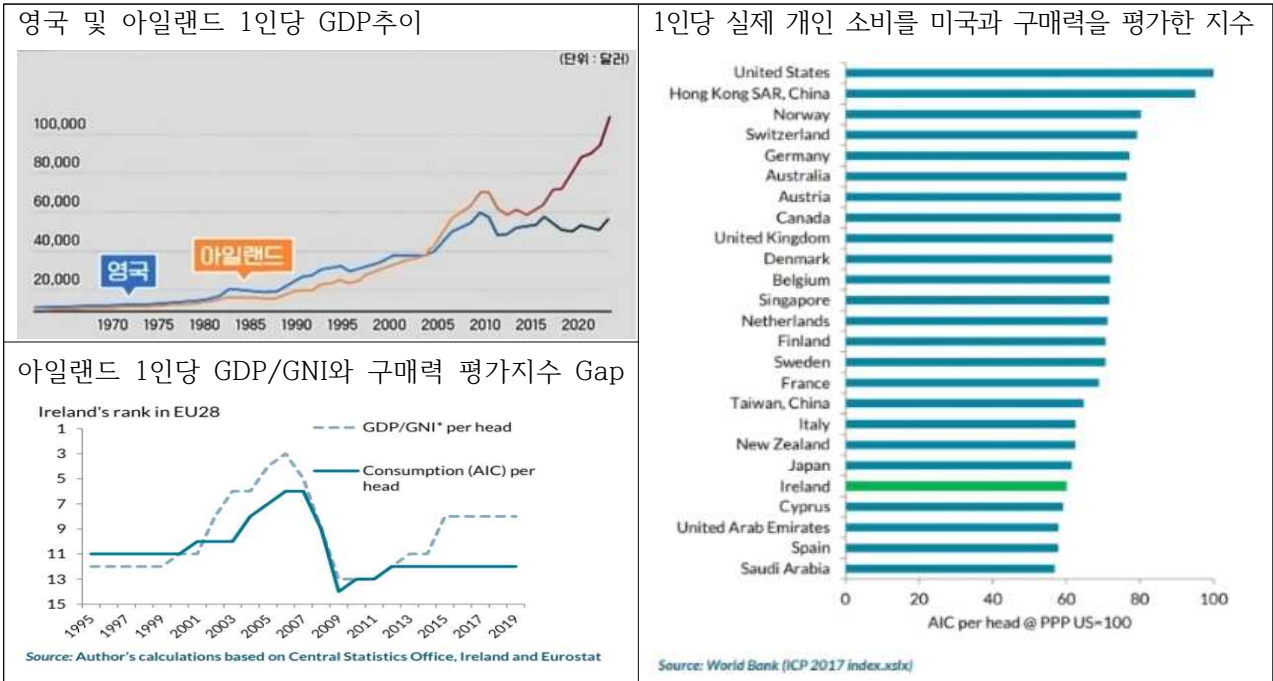
- 2021년 미국 등 OECD 131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적용(안)에 대하여 아일랜드는 소국(小國)의 경쟁우위 확보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국제적 소외국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별도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선에서 법인세율 인상 조치함

9) 아일랜드는 유럽내에서 지적재산권(IP)권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 체계를 보유함에 따라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무형자산을 아일랜드로 이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10)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의 세법을 이용해 글로벌기업들이 법인2개를 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

□ **親기업정책 부작용에 따른 경제지표 왜곡 및 정부지출 증가 현상발생**

○ **외국인 투자활동이 국민소득 재분배 효과로 귀속되지 않는 현상발생**

- IMF연구¹¹⁾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3분의 2가 유령(Phantom)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1인당 GDP가 주변국인 영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되는 등 아일랜드가 부유하게 보이거나, 실제 국민의 소비를 계산한 결과 영국인보다 10% 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됨



(띄어쓰기 8p)

○ **왜곡된 경제지표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 아일랜드의 적극적인 FDI정책 및 법인세 경쟁력 등을 통해 많은 글로벌 IT기업 및 연구개발 센터 등이 입주하였지만 親기업정책의 목적과는 다르게 실제 연구개발은 기업 본사 등이 소재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고함으로써 아일랜드 GDP상승 및 EU분담금을 상승 시키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음¹²⁾
- 親기업 정책이 악용된 사례로 경제지표의 통계적 왜곡 현상은 아일랜드의 경제성과 연관 없이 정부의 재정지출¹³⁾을 확대시켜 국가경제의 위축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존재함

11) Almost two-thirds of Irish FDI is 'phantom' - IMF study (The IRISH TIMES, 2019.09.09.)

12) 아일랜드에 투자한 기업은 親기업정책을 통하여 절세효과를 누리지만, 실제 연구개발 관련된 수익은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것도, 아일랜드 자국에서 사용된 것도 아니면서 아일랜드의 GDP를 상승시켜 EU분담율을 증가시키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옴

13) 외국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국내복지 혜택 지출, EU분담금 지출 등